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12월 1차 (2020.12.1~12.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2019년 생명표 작성 결과 발표

☑ 통계청은 성·연령별 기대여명 등을 수록한 2019년 생명표 작성 결과를 발표함.

-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80.3년)은 OECD 평균(78.1년)보다 2.2년, 여자의 기대수명(86.3년)은 OECD 평균(83.4년)보다 2.9년 높음.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0.12.0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324&pageNo=4&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20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공개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 (제주 국제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0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389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 1조 2,325억 편성

☑ 여성가족부는 2021년 예산을 2020년(1조 1,191억 원) 대비 10.1%(1,133억 원) 증가한 1조 2,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힘.

- 2021년 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0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393

즉시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의무화 등 개정 「아동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음.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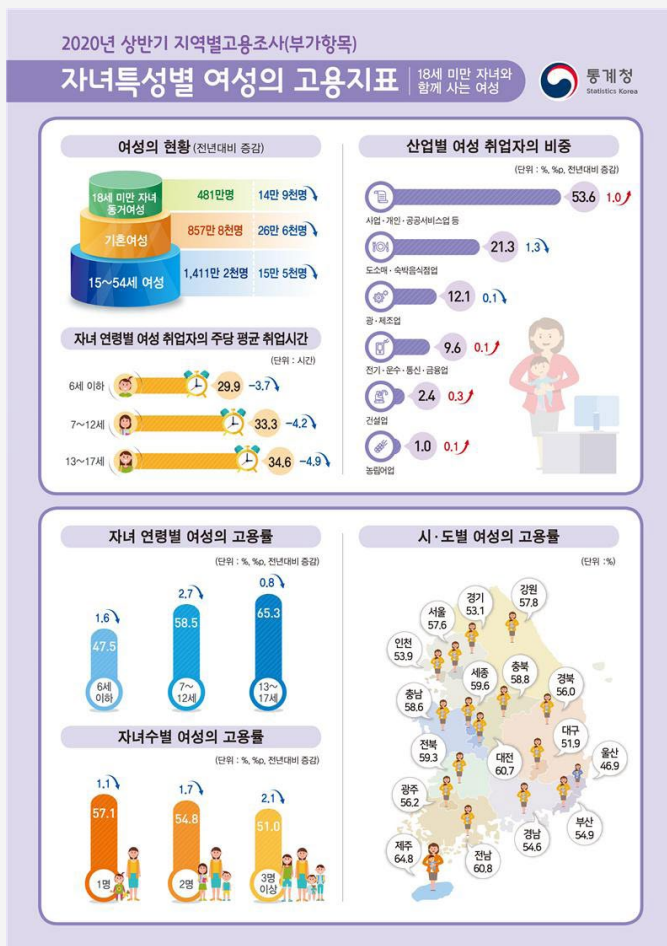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03.]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1466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발표

☑ 통계청은 자녀특성별 고용률, 고용률 상위지역, 자녀 연령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 등을 수록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를 발표함.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0.12.04.]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454&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출국금지, 형사처벌 가능

☑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가능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0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414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발표

☑ 통계청은 최근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1인가구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배포함.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0.12.09.]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17&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확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처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0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415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11일부터 ‘19금’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힘.

<주요 내용>

- 현행 1회인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로 확대
-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 확대
- 산재보험적용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무급종사 친족 추가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1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409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발표

☑ 통계청은 저출산 주요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함.

<주요 내용>

- ‘19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26만 쌍으로 전년대비 4.7% 감소
-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은 42.5%로 전년대비 2.3%p 상승
-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체의 49.1%로 전년대비 1.6%p 상승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0.12.10.]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54&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개선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발표

☑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

- 주민센터 등 다문화가족 서비스 담당 공무원에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 국제결혼중개 광고의 성차별·인권침해 행위 규제 등 관리 강화
- 결혼이민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실시
-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소득기준' 등 반영,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1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423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2020-12-01	부모가 아닌 지자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사실이 적힌 서류가 통상의 출생신고서 대체(안 제54조의2)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2020-12-01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 제도도입(안 제3조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2020-12-04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2020-12-09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하는 우려 차단(안 제34조제7항, 제34조제4항, 제38조)

일·생활균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2020-12-09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육아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개선(안 제18조의2, 제18조의4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2020-12-14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안 제19조의5 신설).
여성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2020-12-07	사업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남녀평등 실현 촉진(안 제8조제4항 신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2020-12-08	현행「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고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안 제1조 등)
건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2020-12-0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낙태가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낙태의 산업화 방지(안 제269조 및 제270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2020-12-01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및 취지에 맞춰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편입시키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에 필요한 필요적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낙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모체와 태아 보호(안 제7조의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2020-12-0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건 없이 산전·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매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게 함. 또한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치내역을 24시간 이내에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5, 제15조의4 및 제15조의8)

건강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2020-12-07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안 제1조 등)
젠더 폭력·안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9인)	2020-12-01	「주민등록법」의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직계혈족 정보가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시·읍·면의 장 등의 열람·교부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2020-12-03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필수 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 기준을 마련하며,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안 제1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6, 제45조, 제53조의2 및 제71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의원 등 10인)	2020-12-0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2020-12-07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안 제1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2020-12-07	현행 신상정보 등에 관한 공개 및 고지제도가 2000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도문에 게재하여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던 당시 법률에 연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확대(안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2020-12-07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강화(안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 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12.07	사사인	'비혼 출산' 열광하는 청년 세대에게 가족이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34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2.08	아시아경제	"생리휴가 쓰려면 생리대 제출?" 생리휴가 사용 제한, 인권침해 논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0811304658207
공직선거 선출직 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12.11	여성신문	"남녀동수, 여성문제 아닌 민주주의 원칙... 헌법 1조3항 신설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93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12.02	KTV	'엄마 성 따르기'...혼인신고 때 결정 불합리하다	송효진 연구위원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14383
12.03	한겨레	20대 여성의 고통은 사회적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김난주 부연구위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605.html
12.04	아주경제	[팬데믹과 돌봄] ② '돌봄'의 가치 인식할 때... 무급 돌봄 정책 대안 절실	김난주 부연구위원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3182608382
12.04	아시아경제	'반쪽짜리' 전국민 고용보험 되나... '특고 육아휴직'은 손도 못대	김난주 부연구위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0409060017169
12.05	뉴스1	"진료거부" vs "개인신념"... '의사 낙태거부권' 뒷짐 진 정부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news1.kr/articles/?4138084
12.08	여성신문	'낙태죄 전면폐지' 여성계 주장에도, 국회서 유지 의견 다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61
12.13	여성신문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질'로 방향 틀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63